

문화방송 노조특보

발행인 최성혁
편집인 강연섭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TEL 02-789-3881~6
www.mbcunio.or.kr
2022년 9월 28일

NATIONAL UNION OF MEDIAC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적반하장 윤석열, 방송장악 음모 분쇄해야

정권의 'MBC 장악'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MBC를 겨냥한 총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을 기점으로 대통령실, 집권 여당, 관변 단체까지 일사불란하게 집단 겁박에 나서고 있다. 급기야 오늘(28일)은 방송을 담당하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당 의원 수십 명이 MBC를 향의 방문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시각 과거 이명박·박근혜 시절 공영방송을 철저히 망가뜨렸던 주역들이 주축이 된 관변 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있다.

조합은 지난 26일 "적반하장 윤석열 대통령 부끄럽다. '방송장악 망령' 국민의회 각성하라"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파문과 관련해 MBC를 표적 삼아 국면을 모면하고 언론장악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시대착오적 탄압임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그제(26일) 저녁 박성제 사장 앞으로 비속어 발언 보도 경위를 설명하라면서 질의서의 탈을 쓴 심문 조서를 보냈고,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한술 더 떠 "MBC 사장, 부사장, 보도본부장 중 1명이 어제(27일) 정오까지 자신의 의원실로 찾아와 허위보도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라"라며 보도통제 시절에나 가능했던 요구를 했다.

조합은 이번 파문의 핵심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대표해 외교 무대에 선 대통령이 싸움판에서나 쓰임 직한 욕설과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 국민 모두를 낮뜨겁게 만들었다는 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말을 뒤집고 오락가락 해명에 논란을 키운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책임전가, 본질 회피

기자단의 잇따른 확인 요청에도 해명 대신 대통령실의 비보도 요청, 욕설은 미 의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그중 제10야당을 지칭한 것이라는 15시간 만의 해명, 심지어는 욕설과 비속어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며 가짜 뉴스라는 주장. 급기야 자막 조작·왜곡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과 내통했다는 정언유착 음모론까지 본질은 회피하고 진실게임과 책임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 대해 MBC 구성원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특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가 민주당과 밀약해 영상을 사전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하루에만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했다고 기사화한 언론사가 148곳에 달하는데, 국민의힘은 수많은 언론사가 MBC에 영향을 받았으며 해당 언론사의 편집권을 폄하했다. 대통령의 MBC 좌표 찍기 한마디에 MBC 보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생략하고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방통심의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부터 놓은 것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중시하는 자유인가?

항의를 가장한 협박

가짜 뉴스, 매국 방송 운운하며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반대진영의 계획된 공격이라는 진영논리와 음모론으로 덧칠해 보려는 수법은 중상모략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술수에 불과할 뿐이다. 더군다나 공영방송 MBC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 수십 명이 버스까지 전세해 MBC를 항의 방문한다는 것은 항의를 가장한 협박이며 방송장악의 불쏘시개로 삼아보려는 수작이다.

현업 언론 단체들은 "언론이 국익을 위한 길은 저널리즘의 사명과 다르지 않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비판, 성역 없는 보도만이 '잘못'을 고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분별한 언론장악의 역사를 재연한다면 정권의 앞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냐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조합은 지난날 공영방송 MBC를 황폐화시켰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9년을 똑똑히 기억한다. 진실을 은폐했고 국민을 모욕하며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닌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사회적 흉기(凶器)였던 지난날의 MBC를.

MBC 본부는 방송·언론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그 어떤 압력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원칙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긴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 공영방송으로서 MBC에 국민과 시청자가 부여한 임무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다.

|22일

- 06:00 경 -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글로벌 펀드 회의' 참석
- 06:10 경 -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 06:28 - 촬영원본, 지상파와 종편 등 12개 방송사에 송출 시작
- 07:40 - 순방기자단, 비속어 확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인지
- 08:00 - 09:00 - 각 방송사 기자들 해당 내용 자사 보도 라인에 보고
대외협력실, 영상기자단에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요청
순방 기자단, 해당 발언에 대해 대외협력실에 맥락 설명 요청.
대통령실 관계자 "오해 소지, 외교상 부담" 비보도 요청
- 09:00 경 - 반디캠에 영상 유포
- 09:33 - 민주당 박홍근 "외교 참사...대통령 막말" 비판
- 09:39 - 대통령실이 정한 보도 제한(엠바고) 해제
- 10:07 - 디지털뉴스룸, 대통령 비속어 발언 영상 원본 보도
* MBC 보도에 앞서 SNS 등에 이미 발언 영상이 올라 오고 있었고, 09시 41분 김동하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등의 SNS에도 영상이 공개됐음.
* KBS·SBS·TV조선 등 148개 언론사가 발언 영상을 당일 보도했고, '이 XX와 바이든' 등 자막은 모두 동일
- 13:00 경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브리핑 "사적인 발언"
- 23:00 경 - 김은혜 홍보수석, 15시간 만에 문제 발언 해명
- "이 XX는 우리 국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 문제 발언 보도에 대해 "짜깁기, 왜곡, 국익 자해"라고 비난

|26일

- 09:00 경 -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서 사과 대신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 규명" 지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MBC 사장 및 취재진 경찰에 고발
- 11:00 경 - 국힘 "민주당-MBC 정언유착..MBC에 당 차원 조치"
- 15:00 경 - 국힘 과방위 "MBC 고발, 언론중재위 제소, 손해배상 청구, 방심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
- 18:12 - 대통령비서실, MBC 사장에게 '비속어' 발언 보도 관련 설명 요구 공문 발송

1. 오보인가?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은 현장에 있던 기자단과 영상을 확인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던 사안

대통령의 외교 순방 중 공식 회의장 안에서 국가수장의 사적 발언이란 있을 수 없음

해당 발언의 맥락에 대한 기자단의 확인 요청에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 대신 비보도 요청

사실 확인을 거친 정당한 취재에 따른 보도

2. 왜곡·자막 조작?

풀 영상은 촬영한 방송사가 영상을 독점할 수 없음

촬영한 영상은 편집없이 100% 그대로 풀(Pool)단에 속한 다른 언론사에게 송출됨

해당 영상은 12개 방송사에 모두 공유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 "짜깁기·조작 없어"

자막은 각 언론사가 해당 영상을 보고 자체적으로 확인 및 판단을 거쳐 결정된 사안

22일 하루에 KBS·SBS·TV조선 등 148개 언론사의 발언 자막은 '이 XX와 바이든'으로 모두 동일

3. 민주당과 내통?

22일 오전 8시를 전후해 각 언론사에 보고가 올라간 뒤 카카오톡을 포함한 SNS 등에서는 이미 해당 발언이 광범위하게 전파됨

박홍근 "MBC와 '정언유착' 의혹? 역겹다"

좌표 찍힌 민주당 비서관 "단체SNS 메신저 통해 입수, MBC 아냐"

MBC 첫 보도에 앞서 국민의힘 관계자도 SNS에 영상을 공개